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양성진 편집인 김영수 전화 031-620-2473 FAX 031-620-2989

-호국보훈의 달 기념 특집-

권두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안보, 경찰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연구특집

남북통일과 유엔 국제평화활동의 합의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황규진

북한의 급변사태시 대량탈북난민의 탈북 규모 및 경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윤영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역사와 경찰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권오국

치안현장탐구

국가안보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노력

경찰교육원 보안학과장 경정 정상봉

외국치안동향

동부아프리카의 중심국가 케냐의 치안상황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김기현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안보, 경찰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 동 열

오 해는 광복 70주년 되는 해이다.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공산당세력의 준동과 건국 방해책동을 막아내고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5달러에 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특히 6.25 남침전쟁을 3년 치르면서 전국의 산업시설과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 없이는 지탱이 안되고, 희망이 없는 최빈국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우뚝 섰다. 세계 최빈국이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짧은 기간에 자유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낸 사례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놓고 ‘한강의 기적(奇蹟)’이라고 경탄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는 ①튼튼한 안보와 치안질서 유지 등 사회안정 ②산업역군들의 헌신어린 노력과 기술개발 ③잘 살아보겠다는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이 융합된 국가적 의지(National Will) ④자유민주화를 위한 헌신 등이 어우러져 이룬 결실이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동력은 바로 튼튼한 안보와 사회안정이었다. 북한 및 공산

세력의 거듭되는 적화공작에 맞서 나라를 지켜내고 치안질서를 유지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을 확보한 것이 국가발전의 토대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찰의 역할은 막중했다. 우리 경찰은 해방직후 거듭되는 공산세력의 준동에 1300여 명이 목숨을 바치며 건국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6.25 남침전쟁 시에도 8200여 명이 전사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호국경찰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이후 거듭되는 북한의 대남과괴공작에도 안보경찰로서 역할을 당당히 지켜왔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우리 경찰은 안보 및 체제수호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바로 보안경찰이다. 그런데, 보안경찰인력은 절반이하(4800여 명에서 2000여 명)로 감축되고 부서기능이 축소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하지만, 보안경찰관의 인력 정상화는 아직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북한과 국내 안보위협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발호하는 데 이를 막아야 할 보안경찰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선진 통일강국으로의 도약에서 중요한 토대인 튼튼한 안보와 사회안정에서의 우리 경찰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따라서 경찰의 안보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보안경찰의 인력 정상화 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PSI

남북통일과 유엔 국제평화활동의 함의

- 유엔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황규진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의 숙원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특히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극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위반 사안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되어 왔다. 민족 화해협력의 차원과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남북통일의 방법은 양극단을 달린다고도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제3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엔 국제평화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언론에 잠시 비칠 정도였고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과 체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늘어왔고 무분별한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지속되자 소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방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책은 초점을 잃기 쉬웠고 논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밖에는 되지 않았다.

예컨대 남북통일을 경찰이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연구된 바는 독일의 경찰 통일방식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경찰 즉, 인민보안부의 조직체계,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데 필자가 연구한 바로는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이 남북통일에 매우 유용할 수 있고 특히, 유엔 경

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을 경험한 모든 군인, 경찰들이 남북통일의 준비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군인들의 경우에는 유엔 경찰의 역할이 유엔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되지 않아 안타까울 정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유엔 경찰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남북통일에 있어서 국제평화활동의 유용성, 한국 경찰의 통일준비 전략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유엔경찰의 임무와 역할

유엔경찰의 임무는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평화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에서 분쟁지역의 무장 해제, 질서 유지, 선거 감독 및 분쟁국의 경찰 창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KO는 유엔군이 대부분이고 유엔 경찰은 그 역할이 매우 적었는데 실제로 유엔 PKO군은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정전감시 미션이 최초였으며 유엔 경찰은 1960년에 이르러서야 콩코 미션을 시작이었다. 초기의 유엔 경찰의 임무는 관찰, 감독, 보고와 같은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했으나 차츰 유엔 PKO가 군, 경, 민이 협력하는 다차원 활동으로 바뀌면서 점점 경찰의 역할이 많아지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코소보 미션과 동티모르 미션과 같이 임시 법집행도 직접 담당하는 적극적 역할로 변모하여 왔다. 최근에는 유엔군이 감소하고 유엔 경찰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냉전 종식 후에는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들이 국제평화활동에 뛰어들면서 경찰의 역할이 점점 더 다종다양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경우에는 군인 미션보다 경찰 미션이 더 많고 치밀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유엔 경찰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 경찰의 경우에는 1994년에 이르러서야 소말리아 미션에 2명을 파견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2년간 동티모르 미션에 5차에 걸쳐 26명을 파견하였고 2014부터 현재까지 라이베리아 미션(UNMIL)에 3명을 파견 중에 있다. 유엔과는 관련이 적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도 하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에 2008년부터 경찰관을 지속 파견하여 오고 있는데 현재는 5명 파견 중이다. 유엔 본부에는 2009년부터 신동균 경감이, 2013년부터는 임원혁 경감이 파견되어 유엔 경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는 한국 경찰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파견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장 미션 뿐만 아니라 유엔 본부에도 더 많은 경찰관을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1> 한국 경찰의 국제평화활동 파견 인원

연도	'94.4 '94.10	'99.6 '99. 9	'06.12 '07.12	'07.12 '08.12	'09.12 '10.12	'10.12 '12.12	'08.10~	'13.4~
국가	소말리아 (2명)	동티모르 (5명)	동티모르 (5명)	동티모르 (5명)	동티모르 (4명)	동티모르 (4명)	아프가니스탄 (5~40명)	라이베리아 (3명)
주요 역할	경찰교육	선거감독	UNMIT 법집행 등	UNMIT 법집행 등	UNMIT 법집행 등	UNMIT 법집행 등	PRT 경찰교육	UNMIL 법집행 등

한편, 유엔 경찰의 최근 추세는 개별 경찰관 몇 명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진압부대(140명) 단위로 파견하여 분쟁 지역의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경찰부대(Formed Police Units: FPU)라고 하는

데 가벼운 전투상황도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유엔 경찰을 파견하는데는 개별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보다 경찰부대(FPU) 단위로 파견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도 경험 축적 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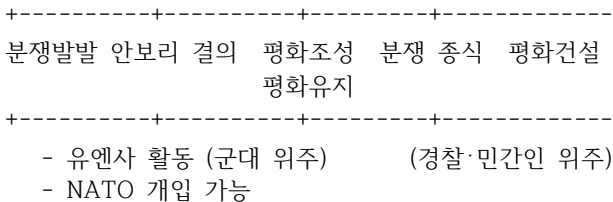
2. 남북통일에 있어서 국제평화활동의 유용성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유용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주장될 수 있다. 첫째는 UN의 수혜에 대한 보은 차원이다. 한국전쟁은 UN 최초의 다국적군 파견임부였고 현재도 비무장지대에 UN군이 주둔 중이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구호대상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이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므로 UN의 국제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UN의 최초 미션이 UN의 국제평화활동을 통해 남북통일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추앙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회원국의 분담금과 인력 공여로 이루어진다. 남북통일을 위해 통일세라든가, 남한 청년들이 군역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유엔이 개입하게 되면 남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력 문제는 일시에 해결된다. 세 번째는 남북통일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남북통일은 예멘과 같이 재분열을 초래하거나, 독일과 같이 사회갈등을 증폭시켜 “통일 괜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통일의 방식이 어떠한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방안은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북한급변사태가 벌어진다면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가장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급변사태라 함은 북한의 내전, 북한의 남침, 핵위협 현실화, 기아·질병이나 자연재해,

난민 발생 등의 사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남침 상황에는 유엔군 사령부(UN Command: UNC)가 주도해야 한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 정전협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할 경우에는 유엔사가 우선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내전이나 기아·질병이나 자연재해, 난민 발생 등에 대해서는 국제평화활동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유엔의 경우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개입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당사국인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동안 남북통일의 대안으로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이 거론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질서유지 차원이나 인도적 구호지원의 사안으로는 유엔 경찰이나 민간인의 지원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국 육군대학 보고서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그 밖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개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 정도라면 정전협정 위반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므로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 초기에는 평화조성(peace making) 또는 평화유지(peace keeping)으로 개념화되며, 분쟁이 줄어들면 평화건설(peace building)을 추진한다. 평화건설 단계에서는 유엔 경찰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그 이전 단계라면 유엔군이 중심이 된다. 전체 흐름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북한급변사태와 유엔 국제평화활동 흐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의 입장에서 유엔 국제평화활동을 통한 남북통일의 준비가 되려면 인도적 구호지원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쟁지역의 질서유지는 군대가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다. 기아·질병이나 자연재해, 난민 발생에 대한 인도적 구호 지원은 경찰과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도적 구호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3. 한국 경찰의 통일준비 전략

한국 경찰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유엔 경찰 인력의 양성이다. 경찰대학 유엔경찰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유엔경찰 전문화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찰대학생을 상대로한 ‘유엔경찰 소개과정’도 운영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력 양성은 유엔의 국제평화활동 미션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참고로 유엔 경찰의 자격요건은 25세에서 55세의 경찰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구사가 가능한 자이며, 무기사용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경찰 공채시험에서 군 PKO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도적 구호지원활동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경찰대학 유엔경찰센터에서는 국제적십자사와 협조하여 인도적 구호지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남북통일이 국제평화활동과 관련없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한국 경찰의 역량이 신장된다면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¹⁾ **PSI**

1) 이 글은 필자가 2015년 4월 1일 경찰대학 통일안보 세미나에서 발표한 ‘남북통일과 유엔경찰’의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대량탈북난민의 탈북 규모 및 경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윤영

들어가는 말

김정은 집권 이후 개성공단 폐쇄, 전쟁발발 위험성 경고와 북한주재 외국공관원 철수 중용, 지속적인 경제침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계층 간 빈부 격차 가중, 미사일 발사 및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급변사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권력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경우 공포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탈북사태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탈북 규모를 초월하는 대량탈북난민사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발생한 대량탈북난민사태는 주변국과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치·사회·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량탈북난민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밀려오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회혼란으로 치안수요를 촉진시키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총체적인 사회혼란을 초래하여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발생한 대량탈북난민의 이동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량탈북난민 발생 요인

북한 주민들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정치적 혼란을 틈타 생존 차원의 대량탈북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쿠데타, 주민봉기

등에 의한 지도자 유고로 독재체제가 붕괴되어 과도정권 수립, 전쟁 또는 내전, 극복할 수 없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따른 극심한 혼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통제기능이 상실된 무정부 상태 하에서 대량탈북난민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 주민들의 대량탈북난민 사태는 접경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응과 같은 대외적 여건도 매우 중요하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물론 접경국가의 국경개방과 탈북민의 접근을 허용하고, 피난처와 식량 및 의료지원 등이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탈북난민을 유도하는 흡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탈북경로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량탈북난민 요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이라는 점에서 한 요인은 다른 요인으로 변화 내지 이행될 수 있다.

대량탈북난민 규모

대량탈북난민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선행연구 역시 산출 근거나 연구자의 입장 등에 따라 그 규모를 최소수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으로 추정하는 등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방법도 직관적 추정 방법에서부터 1.4후퇴 월남자 비율과 동독주민 이주자 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에서 접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산출 규모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대량탈북난민 규모를 좌우하는

다양한 변수 요인 중에서 과거의 경험 즉,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선행연구자의 접근방식을 기초자료로 급변사태 진행 방향, 주민들의 탈북의지, 6.25전쟁 당시 1.4후퇴, 동독의 사례를 기초로 그 규모를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이 실각되어 체제가 전환되거나 붕괴하게 되는 과정에서 81만 명에서 230만 명의 대량탈북난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진행과정에 따라 작게는 17만여 명에서 많게는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대량탈북난민 행렬은 중국 및 러시아로 53만 명이, 남한으로 22만 명이 각각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추정 규모는 북한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국내외적인 변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량탈북 규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탈북난민 산출 추정 규모

근거	산출	규모
○ 동독주민의 대량난민 경험 - 동독 총인구 1661만 명 중 2.6%인 46만 명 서독 망명	○ 북한인구 2335만 명 중 2.6%인 61만 명 ○ 정치범 수용자 20만 명 대량탈북행렬에 동참	81만명
○ 1.4후퇴 시 북한주민 월남자 경험 - 북한인구 95만 명 중 약 9%인 89만 명 월남	○ 북한주민 2335만 명 중 9%인 210만명 - 급변사태가 1.4후퇴 시 보다 직접적인 생명위협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대량탈북난민 비율도 1.4후퇴 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정치범 수용자 20만 명 대량탈북행렬에 동참	230만명
○ 북한주민의 성분분류에 따라 탈북의지 - 적대계층 27%인 648만 명	○ 적대계층 630만 명 중 노약자 등 제외한 60%인 378만 명이 탈북의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 - 탈북민 설문조사 등을 고려 378만 명 중 20%인 76만 명이 탈북 할 것으로 예상 ○ 정치범 수용자 20만 명 대량탈북행렬에 동참	100만명

대량탈북난민 탈출 경로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로 발생한 대량탈북난민은 어느 한 특정 지역을 통해 탈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탈출 경로의 지리적 조건의 용이성, 신변안전, 정착지, 구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우선 대량탈북난민들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베트남 난민사태와 유사한 육로,

해상, 항공 등 세 가지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외에도 탈북 후 해당국가의 난민정착지의 안전과 구호활동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러시아의 국경지역 경로(휴전선 경로 포함), 동·서해상 경로, 항공로 등 세 경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탈북경로는 북한정권의 주민 통제력 유지 여부, 휴전선 봉쇄나 붕괴 등에 따라 혼재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탈북 규모는 급변사태의 정도가 클수록 커질 것이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대량탈북난민 예상 이동 경로 유형

북한 탈출 경로 유형	탈출 지역	탈출 이동로	탈출 경로
1 유형	육로	서부지역 1번 도로 경의선 평양·개성고속도로	* 북중, 북러 국경선 이용 중 국·러시아로 탈출
		중부지역 3번, 43번 도로, 경원선	* 북한정권의 붕괴로 휴전선이 개방될 경우, 개성공단 경로인 경의선을 통해 가장 많이 남하할 것으로 예상
		동부지역 7번, 31번 도로, 동해선	
		평원고속도로 (평양-원산)	국경선 이용 중국, 러시아로 탈출 휴전선 이용 남한으로 탈출
2 유형	해상	서해, 동해지역 해안 인접 도로	선박을 통한 중국, 러시아, 남한으로 탈출
3 유형	항공로	평양지역 등 특수계층 항공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지로 탈출 *주요 특수계층이 항공로 이용

맺음 말

북한 주민들의 대량탈북난민사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이다. 그들의 국내 유입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대량탈북난민사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면 사람간의 통일을 이룰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분단의 아픔과 남북갈등, 남남갈등을 유발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발생한 대량탈북난민들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간파하여 현명하게 극복할 경우 통일의 길을 여는 초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PSI](#)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역사와 경찰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권오국

금 년도는 광복 70년이자, 경찰창설 70년, 6·25전쟁 6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한 예로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전쟁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국군 5명과 경찰 1명, 유엔참전군 4명 등 모두 10명의 호국영웅을 선정하여, 그 뜻을 기리는 1000만 장의 우표를 발행하였다.

호국영웅 차일혁 경무관 영원우표로 부활

경찰 중에서는 기념우표의 주인공으로 독립운동가 출신인 차일혁(1920~1958) 경무관이 선정되었다. 고인께서는 일제 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중앙군관학교 황포분교 정치과를 졸업한 뒤, 항일전에 참전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빨치산 토벌대 대장직을 맡아 남부군 총사령관인 이현상 부대를 괴멸시키는 등 토벌한 공비수가 전체의 10%에 이를 만큼 엄청난 공적을 세웠다. 그동안 전투경찰이란 이유로 그 공훈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차일혁 경무관의 영원우표

우리 경찰청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08년부터 매년 ‘안보사랑 콘테스트’를 개최해 왔다. 올해에도 4월 7일~5월 26일까지 시상금 2070만 원을 걸고, 광고영상·웹툰·포스터 등 시청각 부문, 안보사랑 글짓기와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등 문예부문으로 나눠 총 43편의 당선작을 선정,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역사

보훈제도의 유래는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보훈제도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그 궤를 같이한다. 우리의 전통적 보훈제도 역시 초기 국가인 고조선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수립·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상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문헌상에 보훈제도가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다. 신라는 646년에 상사서(賞賜署)를, 백제는 공덕부(功德部), 사군부(司軍部)를 각각 설치하여 전공자나 전사자의 가족에게 관직을 제수하거나 올려주고, 전답·양곡·주택·노

비 등을 하사했다. 또한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사찰, 기념탑, 기념비 등을 건립하고 기념법회를 열었다. 특히, 신라의 보훈정신은 이를 계승한 수많은 화랑을 배출하여 후일 삼국통일의 초석을 닦는데 기여했다.¹⁾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를 설치하여 건국 공신들과 전쟁 유공자들에게 공신책봉, 관직 상향조정, 관직과 전담하사, 전사자 벼슬 추중, 면역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전몰한 장병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였으며 공신의 후손에게는 공음(公蔭)을 실시했다. 아울러 공신당(功臣堂)을 설립하여 공신들의 공훈을 선양하였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공신도감을 설치하여 공신선정에 관한 일을 맡기다가 1414년 충훈사(忠勳司)로 개칭하고 정례 기구화 하였다. 그 뒤 이 관청은 세조대에 충훈부로 고쳐 조선말까지 존속되었다.²⁾ 이 부서는 관직수여, 공음, 면천, 공신전, 사패전 등 토지지급과 노비하사, 면역 등 경제적 예우, 공신책봉, 시호하사, 배향 등의 기념사업을 실시하였다.³⁾

그러나, 구한말 국가의 방위에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 결과 민족영웅을 다시금 강조하게 되었고, 상실한 국혼의 부활을 노래했다.⁴⁾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 역사가 일제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민족정신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민족의식 복원을 의도한 것이었다.

1) 국가보훈처, 『국가와 보훈』, (서울:국가보훈처, 2002), p.22.

2) 이서행, 『한국의 보훈제도 역사와 보훈문화의 선진화 과제』, 『윤리연구』 제78호(서울:한국윤리학회, 2010), p.284.

3) 김종성,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1999), pp.17-18.

4) 박은식 선생은 “국체는 비록 망하였으나, 국혼이 없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한 것인데, 하물며 지금 국혼이라 할 역사마저 사라지고 없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고 하여, 자신의 사명이 국혼이 살아있는 역사서를 저술하여 국혼을 유지하고 이를 독립의 이념적 측면으로 삼고자 하였다. 박은식, 『박은식 전서』(서울: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75), p.299.

보훈정책의 방향과 의의

우리나라는 헌법전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선언, 독립운동과 4·19혁명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6항에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 보훈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 및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구체적 예우의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외,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 국가유공자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정신을 숭상하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의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의 위기극복에 공헌한 자를 정책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아울러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의욕과 사기, 명예심,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⁵⁾ 따라서, 보훈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체제인 ‘국가관’의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조국의 광복과 국토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애국

5)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제5권 제1호(서울:홍익재, 2006), p.83.

애족심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위국헌신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시켜 올바른 가치관의 창조와 국민통합의 정신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⁶⁾

우리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과거 6·25전쟁 당시 공비 토벌작전으로 순직한 경찰관이 1만368명에 달했던 것처럼, 현재에도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매년 20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순직하고 있다.

국가가 부르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용감히 뛰어들어 자신을 희생하는 선배·동료·후배 경찰관들의 고귀한 넋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었으면 한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난 호(제46호) 당첨자: 신경수

□ 보내실 내용

-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치안정책리뷰에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 중 게재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외국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연구소 전경

6) 강석승, “국가보훈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및 제도 비교,”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6호(서울:남북문화예술학회,2010),p.202.

국가안보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노력

경찰교육원 보안학과장 김정 정 상 봉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경험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동북아의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은 여지없이 우리를 침략했다. 왕과 백성들은 궁궐과 집을 버리고 도망 다녀야 했다. 삼면이 바다로 막힌 이 좁은 나라에서 갈 데가 있었겠나. 때로는 왕이 적장에게 무릎 꿇고 절했다. 400여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산성’이 산 속에 있기에 한낱 등산로 즈음으로 인식하려나. 치욕적인 역사에서 기억을 지웠다면 천만다행이겠는가. 때로는 남의 손에 나라가 강점당했고 국토와 국민은 심각하게 유린당했다. 남의 나라 제국주의 전쟁에 우리의 청년과 여성들이 끌려갔다. 나라 잃은 그들의 애끓는 슬픔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나. 불과 반세기 남짓 그 전에는 전쟁이란 비극도 겪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고귀한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런 우리에게 국가 안보는 곧 생존의 문제였다.

서울의 북쪽에는 이상한 나라가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는 세습을 통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대규모 피의 숙청도 감행하였다. 국민은 굶어 죽지 않으려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는데 핵과 군사력 증강에 몰두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가 나라의 근간이라 배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각종 방송에서는 소위 북한전문가들이 이 이상한 나라의 변화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이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은 심각하다. 6·25 전쟁 이후로 1959건에 이르는 육상 및 해상에서의 침투행위를 비롯하여 2012년까지 994건에 이르는 총격과 포격, 습격, 해상교전과 선박납치, 영공침범과 미사일 사격 등 총 2953건에 이르는 도발을 자행했다(국방백서 2012). 최근 주요사건으로는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12), 3차 핵실험(2013.2.12), 무인기 추락(2013~2014, 4회) 등의 군사적 위협도 있었다.

무기, 군대, 전쟁이라는 1차적이고 물리적인 수단 이외에도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형태는 많다. 그 중 하나가 ‘보안 사이버’ 분야이다. 21세기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사이버(Cyber) 공간에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사이버 테러를 수차례 경험했고 전문가들은 해킹의 발신지와 공격방식 등으로 미루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한다. 2009년 7·7 분산서비스 공격(DDoS), 2011년 3·4 DDoS 사건, 4·12 농협 전산망 해킹, 2013년 3·20, 6·25 사이버 테러,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내부문건 유출 등 정보감시와 해킹을 통한 사이버 공격은 우리의 전산망을 뚫었고 오프라인을 무력화 시켰다.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이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는 외화벌이를 위하여 게임프로그램 개발 및 사이버 도박장 등을 운영하며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부지불식간에

감염된 국내 좀비PC를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해외에서 개설한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한 진화된 안보위해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경찰청이 차단한 SNS 계정은 960개, 불법카페 등의 폐쇄는 142건에 이른다. 2013년 계정차단 338개, 카페 등 폐쇄 132건에 비해 많은 숫자다. 단순히 숫자상의 비교를 떠나 인터넷이란 익명성과 과급력을 활용하여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정보를 조작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여론을 왜곡하여 국내 내부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성장동력도, 사회통합도 사라질 수 있다.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의식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 요즘의 학생들은 6·25 전쟁의 시기와 원인, 전쟁의 시작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등을 잘 모른다는 말이 언론에서 공공연하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정확한 역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반복될 국가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고 걱정이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통일을 논의할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 ‘통일은 대박’, ‘통일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기관, 학계 및 언론 등지에서 통일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있다. 하지만 통일 후 사회·문화를 비롯한 치안의 최접점 지역을 담당할 경찰은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해 보인다. 불현듯 다가올 통일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유형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신속한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생치안의 핵심인 경찰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

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를 견인할 경찰인재를 양성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적합한 연구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2만8000여 명에 이른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사선(死線)을 넘어 우리에게로 왔다. 일선 경찰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한다. 이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기를 현장요원들은 바란다. 이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탈북민을 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거부감을 표출한다. 그리고 탈북민 대다수는 신분을 감추려고 애쓴다. 서로의 벽을 허물어야 할진대 국가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신변보호담당요원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밤을 지새우며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권태형 연구관
 편집위원 :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574 (경비) 61-2574
 • e-mail : webmaster@psi.go.kr

동부아프리카의 중심국가 케냐의 치안상황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김기현

케냐의 일반 상황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의 대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케냐의 수도는 나이로비로, 전 세계 곳곳 뿐인 유엔의 지역 사무소(유엔 사무국은 본부가 뉴욕, 지역 사무소는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세 곳에 있음)가 있는 곳으로 유엔 환경계획UNEP과 유엔 인간주거계획 UN-Habitat의 경우에는 본부가 있다. 또한 뉴욕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대사관·영사관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또한 자연 환경이 뛰어나 사람이 살기 편한 기후라고 한다. 여름(12, 1월)은 10~25℃, 겨울(7, 8월)은 9~22℃ 정도이며, 여름 최고 기온이 30℃ 전후이지만 습도가 없어 그늘에서는 전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날씨이다.

케냐의 위치



케냐의 치안환경

■ 테러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케

냐는 테러사건으로 악명이 높기도 하다. 2015년 4월 2일 17:30경 가리사Garisa 대학교에서 발생한 알샤바브al-Shabaab 소행의 148명 학살 사건(케냐 대학테러), 한국인 사망자 1명도 발생하였던 2013년 9월 21일의 테러(나이로비 쇼핑몰테러), 213명의 희생자를 낸 1998년의 나이로비 소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테러사건(1998년 미대사관테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굵직한 사건 외에도 매년 케냐에서는 약 300~500명이 테러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다. 2014년 1~9월 동안은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케냐 내에서 확인된 순수 테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275명이다.

2014년 초에 소말리아 알샤바브의 위협으로 치안긴장도가 높아진 적이 있었다. 이 시기에 소말리아에서 제조된 알샤바브의 폭탄차량이 몸바사까지 왔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었는데, 몸바사는 소말리아 국경으로부터 무려 500km가 떨어진 지점이다. 또한 중간 중간 여러 곳에 군 및 경찰 검문소가 있다. 이 폭탄차량이 몸바사로 오려면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군, 경 검문소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그 수십 곳의 검문소 중에서 한 곳에서만 제대로 검문하였다면 이동 경로 중에 테러범들을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폭탄차량이 실제 테러에 사용되었다면 1998년 미국대사관 테러에서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다(이 사건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곳이 미국FBI라는 말이 있음).

■ 일반 치안

여느 아프리카 국가보다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케냐의 치안은 여전히 열악하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케냐 내에서의 불법 소지총기의 숫자는 60만 정 이상이라고 한다. 수십 년 동안 내전을 치른 에티오피아, 우간다, 소말리아, 남수단과 국경을 접한 국가로서의 지리적인 영향이 큰 듯하다. 따라서 거의 모든 치안관련 사건은 총기가 연루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무장총기강도살인이다.

많은 외교 공관이 주재한 때문인지, 주재대사의 차량에 대한 강도, 대사관저에 침입한 강도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우리 관저의 경우 직접 강도사건이 발생한 예는 최근 없지만, 관저 앞 100미터 지점 도로상에서도 오후 네시 경에 조깅하던 관저 요리사가 강도를 당한 사례가 있다. 수년 전에는 은행에서부터 현금을 수송하던 차량을 뒤쫓던 무장 강도가 우리 관저 앞에서 수송차량을 정차시키고 총기를 발사하여 현금을 강탈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2012~2014년(3년)간은 다행히 우리 공관 직원이 직접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직원이 거주하는 콤플렉스(우리의 아파트 '단지' 정도에 해당하는 용어이며, 10가구 내지 7,80가구가 한 콤플렉스 내에 거주)에 강도가 침입하여 피해 주민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은 7~8건이 된다. 수년 전에는 우리 공관 직원의 사택에 강도가 침입하여 집에 있던 현금을 강취하고 난 뒤, 그 액수가 작다고 은행에서 돈을 더 찾으라면서 24시간 이상을 끌고 다닌 무장 강도 납치사건도 있었다.

대낮에 주거에 침입하여 점거한 뒤, 그 집의 방문자를 방문하는 순서대로 강도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2014년의 경우 한 교민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집에 있던 사람들을

묶고, 이후 방문하는 지인들을 하나씩 강도하여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나이로비에는 소득 수준(케냐의 1인당 GNP는 PPP기준 3138달러, Nominal기준 1461달러)에 비하여 차량이 많으며, 따라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도둑들은 태연히 교통체증 속에 정차 중인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내 소지품(노트북 컴퓨터, 서류 가방, 휴대폰, 지갑 등)을 들고 간다. 대로변에서 주차한 차량 내에 있던 교민에게 총기를 휴대한 강도가 접근하여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이 모르게 조용히 교민이 소지한 현금, 휴대폰 등을 강취해 간 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해가 진 후에는 차량 정체로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총기 강도가 한 대씩 차례대로 검문하듯이, 모든 차량을 순서대로 털어가는 사례도 있다.

거버넌스의 부재와 부패

■ 교민 관련 사건사고

치안관련 사건 사고 이외에도, 대한항공 직항이 인천과 나이로비를 운행하던 때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다. 어떤 사건은 뇌물을 받아내기 위한 주재국 공무원들의 트랩에 우리 국민이 당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건은 우리 국민이 잘못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처벌이)경미한 사건들은 주재국 공무원들의 트랩인 경우가 많았고, 중대 사건의 경우는 우리 국민이 잘못된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다.

여고생 마약운반사건, 선교사 상아밀수연루 사건, 여행객 항공기내 흡연사건, 정신이상자 공항공무원 폭행사건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중 일부는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어 반향이 꽤나 컸던 경우도 있었다. 마약의 경우, 호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어주다가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특히 우리 국민들이 주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마약 운반건, 상아밀수사건, 흡연사건, 폭행사건 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과는 처리 방법이 많이 달랐다. 사안의 경중보다는 대상자(의 재력)가 더욱 관심을 받는 후진국 거버넌스의 특징을 감안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부 색깔부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띄며, 결국 현지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타점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굵직한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화된 부정에 의한 피해를 들 수 있다. 교민이 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해 시청에 관련 허가를 받았다. 직접 시청에 가서 관련 공무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영수증이 허위라고 집행관들이 와서는 거의 완공되어 가던 식당을 철거해 버렸다. 그 교민은 시청 내에 있던 관련 부서 사무실을 직접 내방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영수증도 발행받았다. 그 영수증도 진본 영수증과 비교하면 관련 공무원 이름, 스탬프 등이 모두 똑 같으며 단지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 하나만이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그 교민이 납부한 수수료는 국고로 입금되지 않았으며, 그 영수증은 가짜였고, 결국 교민이 고스란히 그 부정(내지는 거버넌스의 부재)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다른 사례로는, 비밀비재한 뇌물요구 피해를 들 수 있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나이로비 공항에 탑승 대기하던 우리 여행객에게 비행기 출발 20여분 전에 여행사 사원으로 보

이는 공항의 직원이 시비를 걸었다. 차고 있던 목걸이가 상아로 만들어져 금제품이란 것이다. 누가 보기에다 상아는커녕 플라스틱임이 분명한 목걸이었다. 그러면서 빨리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미화 500달러를 달라고 은밀히 요구하였다. 화가 난 여행객은 뇌물을 거부하고 정식으로 경찰관을 불러 주기를 요청하였다. 물론 경찰관은 그 여행객이 타려던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에 나타났고, 그 혼잡한 와중에 여행사 사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도주하고 이 후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여행객은 비행기만 놓친 격이 되었다.

■ 부패

앞서 알샤바브가 테러에 사용할 폭탄 차량을 소말리아에서 제조하여 몸바사까지 운반하였던 사건에 대해 소개하였다. 실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국경을 통과하는 데는 약 200달러 정도, 남수단 국경 쪽에 있는 Kakuma 난민캠프에서 800km가량 떨어진 나이로비까지 모든 검문소는 1000실링(미화 약 11달러)정도만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부패가 심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테러나 강도사건 이라든지 실제 당국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노력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언급된 교민 사건사고처럼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진 케냐의 공무원이 많다.

케냐의 현장 경찰관 한 달 봉급은 30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로는 생활이 어렵고 당연히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PSI](#)

연구소 소식

◆ 2015년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연구소는 5월 11일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용역연구과제>

연번	과제명	연구자		비고
		소속	성명	
1	경찰대학 학년별 인성 목표제 및 검증도구 개발	고려대	홍세희	지정
2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방안 강구	성신여대	이성기	지정
3	손실보상제도의 합리적 활용방안	서원대	김영식	지정
4	정년연장이 경찰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	김형성	지정
5	횡단보도 설치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	가천대	장일준	지정
6	민간 과학수사 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	홍성욱	지정
7	분노·충동범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중앙대	이장한	지정
8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의 경찰관 현장 활용 패킷(packet)에 관한 연구	한중대	이소영	자유
9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확보 방안 연구	조선대	이 훈	자유
10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한국형 리버스(Reverse) 112도입 모델 연구	계명대	이성용	자유
11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건국대	신준섭	자유
12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계명대	정육상	자유

◆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간·배포

연구소는 5월 31일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를 발간·배포하였다.

이번 「치안정책연구」에는 모두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원고모집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인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2호에 게재할 원고를 6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연구관 동정

◆ 강용길 연구관(사회안정대책연구실)은 4월 15일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평가위원으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2015년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업체 선정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의 구체적인 셉테드(CPTED) 적용방안을 평가하고 논의하였다.

◆ 김문귀 연구관(사회안정대책연구실)은 6월 10일 경찰대학 제2기 경호실 신입직원 수탁교육과정에서 ‘회복적 사법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 강의하였다.

◆ 김윤영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지난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윤재옥, 경찰청,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공동 주관 ‘민간조사업(탐정)도입 관련 학술세미나’에서 ‘민간조사업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순경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고, 5월 31일 발간한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에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를 공동(교신저자)으로 게재했다.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6월 10일 제31기 치안정책과정과 제2기 대통령경호실 신입직원 수탁과정에서 ‘범죄의 이해와 예방’, 5~6월 중앙경찰학교 제284기 신입순경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5월 28일 육군본부 과학수사포럼에서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를 주제로 발표하고, 6월 12일 대한범죄학회 세미나에서 ‘Adoption PBL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Education: Challenge and response’에 대해 토론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6월 19일 중국 칭다오시 향도행정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한국법제연구원, 단국대, 중국연태대학 주최)에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관계’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연구소 인사

◆ 6월 15일 치안정책연구소에 권오국, 김남선, 류연수, 임희정 연구관이 부임하였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